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Un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xamining Interaction Effects with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texts

Youngho Shin* · Youngho Cho**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ogang University

Abstract

Labour unions have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key actor i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However,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ur unions and income inequality is not straightforward but it varies depending on variou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texts.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s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government partisanship as major conditions affecting the income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labour unions and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In particular,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union density on income inequality in terms of market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using panel data from OECD countries of the period 1990~2019 when the Cold War ended and globalization intensified.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unions on reducing income inequality was more pronounced in disposable income than in market income, and the effect was conditional. The union's effects vari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centr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rather than the coordination mechanism.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e union's impact was evidenced in centrist governments rather than left-wing governmen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labour unions are adopting more flexible political strategies, moving away from their traditional relationship with left-wing par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unions' political and economic roles show both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era of rising inequality.

Keywords

Labour union, Income inequality, Globalization, Power resource, Government partisanship

* First Author. email: politik348@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hcho@sogang.ac.kr

세계화 시대의 소득 불평등과 노동조합: 제도적·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신영호** · 조영호***

서강대학교

요약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주요 행위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노동조합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도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으로 단체교섭의 제도적 특성과 정부의 정파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냉전 이후 1990~2019년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시장소득보다 처분가능 소득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효과는 조건적이었다. 노조의 효과는 조정 메커니즘보다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에 따라 달랐다. 선행연구와 달리 정치적 조건에서 노조의 효과는 좌파 정부가 아닌 중도 정부에서 나타났고, 이는 노조가 세계화 시대에 전략적으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노조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노동조합, 소득 불평등, 세계화, 권력자원, 정부 정파성

* 이 논문 (또는 저서)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3A2A02090384).

** 1저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이메일: politik348@naver.com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메일: yhcho@sogang.ac.kr

I. 서론

많은 학자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주로 단체교섭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단체교섭 측면에서, 노조는 표준화된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사용자 단체 및 정부와의 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임금 분산을 억제하였다 (Freeman & Medoff, 1984; Western & Rosenfeld, 2011). 정치적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고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관련 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노조의 쇠퇴를 지적하며 (Ahlquist, 2017; Bartels, 2016), 노조와 소득 불평등이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Chao & Ee, 2024; Perron, 2023). 즉 노조의 조직률 감소는 노조의 임금 협상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은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도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Doellgast & Benassi, 2020; Garnero, 2021). 노조의 영향력은 대공황 이후 지난 100년 이상 자본주의 산업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사회적·정치적 제도들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Visser, 2013). 이에 학자들은 복잡한 제도적 맥락을 바탕으로 노조의 영향력에 접근한다(Wallerstein & Western,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교섭은 노조가 실질적인 교섭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므로, 구조적인 환경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Visser, 2013). 가령, 퀴네(Keune, 2021)는 노조 조직률, 중앙집중화된 교섭 방식, 사회적 합의 제도 등이 결합할 때, 노조가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조의 영향력은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달라진다(Brady et al., 2017). 전통적으로 좌파 정부는 노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동 친화적 정책을 통해 노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Korpi, 2022;

Stephens, 1976). 반면 우파 정부는 시장 중심적 접근을 선호하며 노조보다는 생산자와 중산계급을 대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최근에는 중도 정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Kelly & Witko, 2012). 종합하자면,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조와 정당 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사민당 및 좌파 정당들이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변화하여 전통적 지지집단인 노조의 이익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취하면서, 노조 또한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Montebello et al., 2023). 특히 내부자-외부자 이론은 노조와 좌파 정부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Lindbeck & Snower, 2001; Rueda, 2005). 이는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내부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과 같은 좌파 정당으로부터도 정치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ueda, 2005).

위와 같은 이론적 대립은 현대 노동 환경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도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어떻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조 조직률과 함께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 조정 메커니즘, 그리고 정부 구성 인사들의 당파적 성향 등 다양한 조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세계화 시대 노조의 정치·경제적 역할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 조직률의 감소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임금 교섭의 중앙집중화와 중도 정부의 당파성이 조건으로 노조 조직률과 상호작용할 때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영향력이 단순히 조직률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과 3장에서는 먼저 노조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4장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노조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제도적·정치적 변수와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종합하고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노조의 임금 평준화 효과에 주목하였으나(Freeman & Medoff, 1984; Card, 2001), 최근에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노조의 역할과 영향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루어지고 있다(Jaumotte & Osorio Buitron, 2020). 특히 최근의 정치경제학 연구들은 노조의 쇠퇴가 노동시장 보호 약화, 최저임금 하락, 그리고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Ahlquist, 2017; Bartels, 2016). 구체적으로,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평준화를 추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 왔다. 같은 논리로, 연구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노조의 영향력 약화는 소득 불평등의 악화와 연결된다고 지적한다(Chao & Ec, 2024; Perron, 2023).

그러나 노조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내부자-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노조는 내부 노동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Lindbeck & Snower, 2001). 예컨대,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을 보장받은 반면, 저소득 노동자들은 경기 침체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동 완충제 역할을 하였다(Gautié, 2011; Palier & Thelen, 2010). 결과적으로, 폰투스(Pontusson, 2013)

은 노조가 여전히 평등주의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연구들은 여전히 노조 영향력 약화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임을 재확인하였다(Jaumotte & Osorio Buitron, 2020; Kristal & Cohen, 2017). 빅터(Victor, 2019)는 자본과 노동의 교섭력이 임금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한계 생산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파 이론을 반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크리스탈과 코헨(Kristal & Cohen, 2017)은 임금 결정 제도 약화의 중심에는 기술 변화가 아닌 노조 조직률의 하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노조 조직률의 변화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으며, 단체교섭 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arnero, 2021; Keune, 2021). 이는 노사 관계가 단순히 노조 조직률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Wallerstein & Western, 2000). 특히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 이후 발전한 단체교섭과 임금 협약의 적용 제도들은 노동시장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며 불확실성을 줄인다(Visser, 2013). 즉, 각국의 노조들은 제도적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조정(Coordination) 메커니즘, 단체교섭의 적용 범위(Coverage) 등 교섭 과정의 제도적 변수에 주목하여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Jaumotte & Osorio Buitron, 2020; Visser, 2016).

실제로 중앙집중화된 체제와 조정 메커니즘은 임금 불평등 개선에 도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Ahlquist, 2017; Dahl et al., 2013; Garnero, 2021). 두 요소 모두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앙집중화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수준(예: 국가, 산업, 기업)을 의미하며, 조정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교섭 단위 간의 임금 정책을 통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두 개념은 노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Visser, 2013).

먼저 중앙집중화된 교섭 체계에서 노조는 자신들의 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수준, 실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만, 분권화될수록 이러한 효

과가 나타나기 어려워진다(Dahl et al., 2013). 반면, 조정 메커니즘은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한다(Addison, 2016). 이는 상위 수준에서 합의된 내용을 하위 수준으로 전달하는 사회적 파트너의 신뢰와 역량이 형식적으로 유사한 단체교섭 제도 간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Vandekerckhove et al., 2022).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단체교섭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Baccaro, 2011; Visser, 2013).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유연성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 제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써(Visser, 2013)는 산업별 협약이 과거의 평등화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의 유연성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조정 메커니즘도 소외계층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바카로(Baccaro, 2011) 역시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의 재분배 효과가 1990년대부터 약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한편,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정치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난다(Macdonald, 2019; Mosimann & Pontusson, 2017). 노조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Ahlquist, 2017; Leighley & Nagler, 2007). 결과적으로, 노조는 단순히 노동자들을 넘어서, 특정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이해된다(Kim & Margalit, 2017).

따라서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 관계는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달라진다(Alexiou & Trachanas, 2023). 권력자원 이론(Korpi, 2022; Stephens, 1976)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노동계급의 조직된 힘과 정부 역할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브래들리 외(Bradley et al., 2003)의 연구는 노조 조직률과 임금 교섭의 중앙집중화가 정부의 정파성과 결합하여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폰투스슨(Pontusson, 2011)은 북유럽의 사례를 통해 사민주의 정책의 성공에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노조의 존재가 결정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노조와 정당 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Lindvall & Rueda, 2012). 이미 포괄정당으로 변화한 유럽의 사민당들은 전통적 노동조합보다는 중도층과 도시 중산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

고, 노동조합 또한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과거의 독점적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령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나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노동 개혁을 밀어붙였고, 최근 서구의 일부 노동자들은 중도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도 관찰된다. 노조도 이제 선택권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한편, 종속변수의 측면에서 일부 연구들은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시장소득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처분가능소득에서 발생하는지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다(Garnero, 2021; Jaumotte & Osorio Buitron, 2020; Vandekerckhove et al., 2022). 노조가 제도적 환경과 정치과정을 통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시장소득보다는 조세정책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노조의 영향력을 조건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노조 조직률을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되,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수준, 조정 메커니즘, 정부의 이념적 성향 등 제도적·정치적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한다. 둘째, 노조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모두 활용하여 노조의 1차 분배 및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살펴본다.

Ⅲ. 이론적 논의

노조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양상을 보인다. 초기 연구들이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에 주목했다면,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조건을 고려한다. 특히 단체교섭 제도의 특성과 정부의 정파성 등이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조건 짓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노조와 소득 불평등의 근본적인 관계는 논쟁적이다. 노조가 소득 불평

등을 심화한다는 주장은 노조 프리미엄이 노조와 비노조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고용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논리에 기반한다(Friedman & Friedman, 1980; Lewis, 1963). 특히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맥락에서, 노조는 내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외부자와의 격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Lindbeck & Snower, 2001).

반면 위협 효과 이론은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이 비노조 부문에 확산하여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입각한 단일 임금 체계와 자동승급제를 관철하고(Freeman & Medoff, 1984), 저학력 및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소득 불평등을 개선한다(Blau & Kahn, 1996; Card, 2001).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노조의 조직률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의 완화 효과가 클 것이다.

이 연구는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과 정부의 당파성에 주목한다. 먼저 단체교섭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식적인 협상 제도로, 때로는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의 갈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체교섭은 경제적, 사회적 압력을 중재하고 시장 경제의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정된 교섭 모델은 파업을 감소시키고 임금을 안정화한다(Visser, 2013). 특히 학자들은 포괄적이고 중앙집중화된 교섭 제도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지적한다(Blau & Kahn, 1996; Visser, 2013).

단체교섭 제도는 크게 중앙집중화와 조정 메커니즘으로 나뉜다. 중앙집중화는 국가나 산업 전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교섭부터 개별 기업이나 지역 단위의 분권화된 교섭까지 다양하다(Visser, 2013). 이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서 유럽의 조정 시장 경제와 영미식 자유 시장 경제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Hall & Soskice, 2001).

다음으로 조정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단체교섭 단위의 임금정책을 통합하는 정도 또는 상위 행위자의 합의사항을 하위 행위자가 따르거나 준수하는 정

도로 정의된다(Kenworthy, 2001; Visser, 2013). 가네로(Garnero, 2021)에 따르면, 조정을 통해 산별 협약이나 기업 협약 과정에서 거시 경제 조건을 고려한 공통의 임금 인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정 메커니즘은 노조의 집단적 입장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불평등 완화와 노사관계에 기여한다.

비써(Visser, 2013)에 따르면, 완전한 중앙집중화와 완전한 조정이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니다. 완전히 분산된 기업 수준의 교섭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경우 한 노조(연맹)가 국내의 모든 근로자 대표를 독점하는 상황에 가깝고,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고용주 협회가 국내 700여 개 기업별 협약의 대부분을 준비하고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최고 수준의 연맹 간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교섭도 하위 수준에서의 모니터링과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단체교섭이 제도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조직적 힘이 담보되어야 한다. 돌가스트와 베나시(Doellgast & Benassi, 2020)는 단체교섭이 노조와 사용자 간 권력관계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노조의 참여적이고 조직적인 권력이 협상 능력을 결정한다. 반면, 노조 조직률이 낮거나 일부 집단만을 대표하는 경우 노조의 독점효과가 압축 효과를 압도하여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Baccaro, 2011).

결론적으로 노조의 조직률과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은 상호작용을 하여 소득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수준이 높을 때, 노조 조직률의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3: 단체교섭의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 노조 조직률의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노조는 정치시장에서 조직화된 표를 가진 중요한 집단적 행위자이다. 노조의 정치적 동원 활동은 다층적인 효과를 만드는데, 이는 투표율 증가와 정당에 대한 영향력 강화(Ahlquist, 2017)부터 경제 정의 및 재분배 요구 증진

(Macdonald, 2019)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권력자원 이론은 노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Brady et al., 2017). 코르피(Korpi, 2022)와 스티븐스(Stephens, 1976)는 자본과 경제 엘리트가 국가의 노동정책과 기업에서 노동과 약자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권력자원의 불균형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과 약자들은 연대와 결속을 통해 정치적 자원을 결집한다. 즉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Huber & Stephens, 2010). 특히 노동계급은 좌파 정당과 선거에서 표와 정책을 거래하고,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한다. 가령 사회민주당은 노조와의 연합으로 얻은 정치 권력을 재분배와 사회 정책 실현에 사용한다(Korpi, 1989). 구체적으로 사민당과 좌파 정당은 최저임금을 높이고(Huber & Stephens, 2010), 빈곤율을 낮추며 (Brady et al., 2017), 노조에 친화적인 협상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루에다(Rueda, 2005)의 연구 이후, 사민당과 노조가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익 중 어느 쪽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등장했다. 내부자는 높은 고용 보호를 통해 안정을 얻지만, 외부자에게는 이러한 보호가 오히려 취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사민당이 노동시장 내부자를 위한 정책을 취하고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좌파 또는 중도좌파 정당들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내부자의 이익을 강조하면 외부자의 지지를 잃고, 외부자의 이익을 강조하면 내부자들이 중도 우파 정당으로 이탈하기 때문이다(Lindvall & Rueda, 2014). 이와 더불어,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노조와 좌파 정당 간의 전통적 관계도 재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오베리 외(Öberg et al., 2011)는 1970년대 이후 노조와 좌파 정부 간의 교환 관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노동계급과 좌파 정당 간 전통적 연대가 느슨해지면서, 중도 정당들이 노동자들에 접근한다. 켈리(Kelly, 2009)는 미국에서 중도 정당이 좌파 정당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중도 정당이 소득 불평등 문제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손정욱과 박종희(Son & Park, 2024)의 연구에

따르면, 중도 정부는 좌파나 우파 정당에 비해 조직화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도 정부는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유권자 모두를 상대로 정책을 실행하고, 다음 선거에서 재집권을 준비할 수 있다. 노조 또한 전통적 연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정치적 선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Jansson, 2017) 중도 정부와의 새로운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정부 내각 구성원 중 좌파 비율이 높을 때, 노조의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커질 것이다.

가설 5: 정부 내각 구성원의 중도 비율이 높을 때, 노조의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커질 것이다.

IV. 연구 설계: 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 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국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OECD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민주적 제도들을 공유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조와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충분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한 이유는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1차 세계화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2차 세계화가 주로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1990년 이후 냉전 종식과 함께 시작된 3차 세계화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통합을 나타낸다. 1990년 이후, 3차 세계화 및 탈산업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노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 효과 모델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0년 단위의 연도 고정 효과와 국가별 고정 효과를 모델에 포함했다. 연도 고정 효과는 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추세와 특정 시기의 공통적인 충격을 통제하기 위함이며, 국가별 고정 효과는 각 국가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제 방법은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주요 종속변수로는 프레데릭 솔트(Frederick Solt, 2020)의 표준화된 세계 소득 불평등 데이터(SWIID)를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에서 소득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각각은 세전과 세후의 가구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두 가지의 지니계수를 동시에 다루는 이유는 노조가 사전 분배와 사후 분배 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노조 관련 변수들은 OECD/AIAS ICTWSS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해당 데이터는 체계적인 수집 과정과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국가 간 비교가능성과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 외에도 단체교섭의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와 조정 수준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파성을 측정하는 내각 당파성 변수를 우파(0), 중도(1), 좌파(2)의 명목형 변수로 활용한다. 내각 인사들의 정당 소속 비율을 나타내는 아르밍겐 외(Armingeon et al., 2023)의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여 정부의 이념 성향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좌파 정당 구성원이 내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해당 정부를 좌파로 간주하였다.

〈표1. 기술통계〉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총관측치
시장소득 지니계수	47.0	4.4	32.3	56.4	1,205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31.7	6.9	16.8	53.2	1,205
노조 조직률	31.1	21.2	4.2	93.9	917
중앙집중화	2.0	1.0	0.9	4.9	1,048
조정	0.3	0.5	0.0	1.0	1,063
정부 내각 당파성	0.8	0.9	0.0	2.0	981
실업률	7.8	4.0	1.7	27.8	1,183
인플레이션	7.4	42.6	-4.5	951.7	1,199
제조업 비중	15.5	4.8	4.6	35.0	1,117
무역의존도	86.0	51.5	15.8	388.1	1,185

이 연구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제조업 비중, 무역 개방도 등의 변수들을 통제한다. 경기 확장기와 침체기의 고용 및 임금 변화는 소득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특정 기술이나 직업군의 수요를 변화시켜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술 이전 등은 국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표1>의 기술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노조의 조직률이 감소했음에도 평균 31%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간 편차가 존재한다.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노동 관련 변수들의 국가별 차이는 각국의 고유한 교섭 환경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변수 및 통제 변수들을 활용하여 노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교섭 제도 및 정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영향도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V.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고정 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노조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2>에 제시된 결과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조 조직률과 제도적 변수들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정치적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였다. 상술했듯이 소득 불평등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 중 1-2에서는 노조 조직률과 중앙집중화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 자체는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조 조직률과 중앙집중화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에서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시장 임금 분포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조정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맥락이 노조의 영향력을 조건 짓는다는 이론(Darvas et al., 2023; Doellgast & Benassi, 2020)을 뒷받침한다. 노조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단순히 조직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발전해 온 노동시장의 사회적 제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Visser, 2013). 이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단순히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를 강화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치적 변수를 포함한 모델에서 노조 조직률과 중도 정부 비중의 상호작용이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든 조건 효과를 동시에 투입한 모델 1-5에서는 중도 정부와의 상호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두는 정부와 노조의 협력이 시장 교섭력 증대를 통해 임금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집중화와 상호작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을 고려할 때,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 과정에서 정치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모델에서 노조 조직률이 불평

등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두 가지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 모델 2-2에서는 중앙집중화가 유의미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시장소득 분배의 개선뿐만 아니라 재분배 과정까지 확장됨을 보여준다. 시장소득 모델과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가 노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노조의 효과는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특히 중앙집중화된 교섭 환경에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변수를 포함한 모델들에서는 중도 정부 변수의 조건적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좌파 정부의 조건적 효과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 2-5에서도 같은 결과가 지속되었으며, 중앙집중화와 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통적인 권력자원 이론의 예측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루에다(Rueda, 2005)의 내부자-외부자 이론에 부합한다. 또한 중도 정부가 다양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노동시장 정책에서 중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있어 노조와 중도 정부 간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통제 변수에서 실업률은 모든 모델에서 소득 불평등을 유의미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이 소득 불평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족하지만,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소득 불평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실업만큼 강력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는 일관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 이후 발생한 세계화된 생산과 소비의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1>은 모델 1-5와 2-5에서 노조 조직률과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을 그래프로 제시한다. 모델 1-5에서는 중도 정부와의 상호작용이, 모델 2-5에서는 중앙집중화 및 중도 정부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 완화는 노조 조직

률의 상승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제도적 기반과 노조 조직률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던 기존 연구의(Guschanski & Onaran, 2022; Keune, 2021) 견해와 일치한다.

정치적 변수에 관한 분석 결과는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모두에서 권력자원 이론의 주장(Huber & Stephens, 2010; Korpi, 2022)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의 좌파적 성향이 강화될수록 재분배가 증가하며(Rueda, 2008), 노조와 좌파 정부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만든다(Alexiou & Trachanas, 2023)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조 조직률과 좌파 정부 간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팔리어와 텔렌(Palier & Thelen, 2010)은 좌파 정부 집권 시기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좌파 정부가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직면하여, 노조와의 협력이 오히려 노동시장 내부자의 이익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고티에(Gautié, 2011)는 좌파 정부의 유산이 강한 프랑스에서조차 내부 노동자들이 고용 유연화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좌파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내부자의 임금을 극대화하려 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 이후 서유럽의 사민당과 중도좌파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내부자와 좌파 정당이 소득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도 정부와 높은 노조 조직률의 결합이 시장소득 개선 및 재분배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중도 정부가 좌파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노조와 중도 정부 간 연계가 형성된다는 기존 연구(Kelly, 2009)의 주장과 일치한다.

중도 정부와 노조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 이유는 권력자원 이론을 넘어서는 좌파 정부와 중도 정부 간의 차별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중도 정부는 좌파나 우파에 비해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유인

과 이념적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도 정부가 노조와 협력하면서도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 이해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된 시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 동안 중도 정부는 전통적인 노조의 이익과 새로운 노동 형태의 요구를 균형 있게 다루려 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중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조 조직률 증가,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동시에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중도 정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노조 조직률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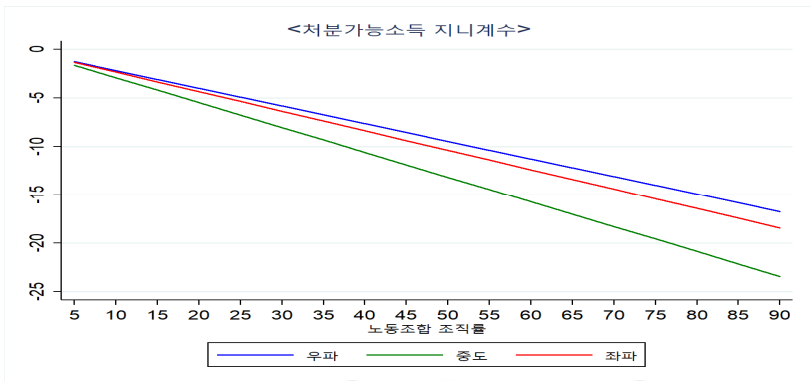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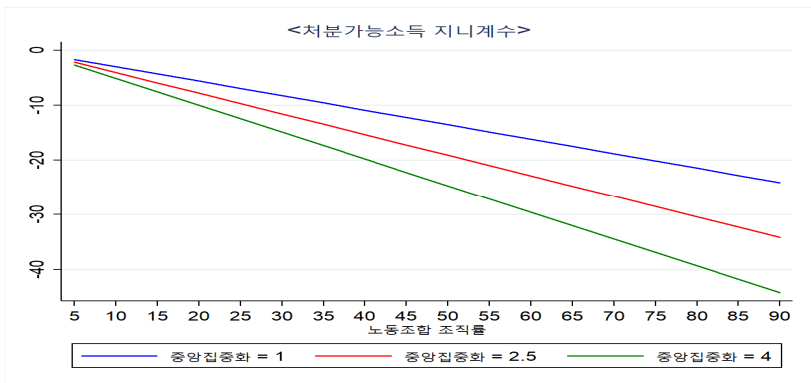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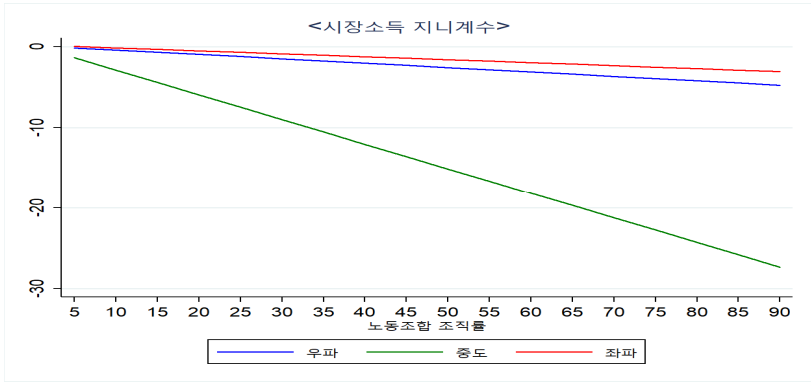
	시장소득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노조 조직률	-0.290 (0.246)	-0.174 (0.246)	-0.054 (0.194)	-0.048 (0.176)	0.039 (0.178)	-0.354*** (0.104)	-0.283** (0.142)	-0.217*** (0.074)	-0.197*** (0.075)	-0.143* (0.099)
중앙집중화 정도	-0.040 (0.064)	-0.045 (0.064)	-0.086 (0.066)	-0.068 (0.059)	-0.090 (0.063)	0.037 (0.036)	0.038 (0.031)	0.021 (0.039)	0.025 (0.038)	0.031 (0.032)
조정 매커니즘	-0.108 (0.151)	0.139 (0.242)	-0.069 (0.155)	-0.096 (0.144)	0.201 (0.211)	0.074* (0.042)	0.211* (0.112)	0.081* (0.044)	0.076 (0.048)	0.207* (0.111)
정부 내각 당파성										
중도 정부			0.009 (0.053)	-0.004 (0.041)	0.012 (0.049)			-0.011 (0.028)	-0.012 (0.020)	0.003 (0.023)
좌파 정부			0.078 (0.047)	0.077 (0.047)	0.090* (0.049)			0.020 (0.023)	0.027 (0.025)	0.034 (0.027)
노조 x 중앙집중화		-0.124* (0.066)			-0.065 (0.059)		-0.080*** (0.028)			-0.075*** (0.026)
노조 x 조정		-0.124 (0.175)			-0.202 (0.146)		-0.061 (0.061)			-0.066 (0.055)
노조 x 중도 정부				-0.289*** (0.071)	-0.251*** (0.066)				-0.106*** (0.036)	-0.076** (0.026)
노조 x 좌파 정부				-0.005 (0.046)	0.018 (0.043)				-0.033 (0.026)	-0.034 (0.027)

세계화 시대의 소득 불평등과 노동조합: 제도적·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실업	0.210*** (0.046)	0.206*** (0.048)	0.174*** (0.046)	0.184*** (0.043)	0.177*** (0.043)	0.071*** (0.025)	0.061** (0.025)	0.053** (0.025)	0.056** (0.023)	0.055** (0.024)
인플레이션	1.082* (0.607)	0.796 (0.569)	0.274 (0.599)	0.307 (0.590)	0.137 (0.576)	0.525** (0.233)	0.345 (0.227)	0.211 (0.222)	0.200 (0.231)	0.104 (0.252)
제조업 비중	0.018 (0.082)	0.023 (0.080)	-0.057 (0.065)	-0.074 (0.066)	-0.068 (0.065)	0.024 (0.046)	0.026 (0.043)	-0.014 (0.034)	-0.014 (0.035)	-0.012 (0.033)
무역의존도	0.052 (0.104)	0.090 (0.098)	0.045 (0.104)	0.068 (0.101)	0.095 (0.097)	-0.003 (0.050)	0.021 (0.048)	0.014 (0.049)	0.018 (0.047)	0.040 (0.044)
R제곱	0.480	0.502	0.546	0.571	0.586	0.277	0.310	0.279	0.302	0.349
사례 수	747	747	661	661	661	747	747	661	661	661

a. ***: $p < 0.01$ **: $p < 0.05$ *: $p < 0.1$ b. 표준화 계수를 사용함

〈그림1. 노조 조직률과 소득 불평등 간의 조건적 효과〉



VI. 결론

본 연구는 1990~2019년 동안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조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단순히 조직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맥락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Doellgast & Benassi, 2020; Garnero, 2021). 이러한 접근을 통해 노조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이해를 넘어서,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와 정부의 정파성이 노조의 영향력을 어떻게 조건 짓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조의 조직률은 여전히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처분가능소득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장소득이 처분가능소득으로 전환되는 정치·사회적 과정에서 노조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는 직접적인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재분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acdonald, 2019; Mosimann & Pontusson, 2017). 다만 시장소득에 대한 노조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단체교섭 제도와 같은 구조적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내부자-외부자 이론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임금 교섭의 제도적 맥락, 특히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수준이 노조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조건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과 중앙집중화의 상호작용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중앙집중화된 교섭 구조하에서 노조의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이 시장 임금 분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Darvas et al., 2023).

해당 결과는 노조의 영향력이 조직률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 이상 발전해 온 산업자본주의의 사회적 조정 기구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발전한 단체교섭 제도들은 노동시장의 경쟁 과정에 대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Visser, 2013). 본

연구 결과는 노조 조직률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제고할 것을 주장한 기존 연구의 견해와 일치한다(Guschanski & Onaran, 2022; Keune, 2021). 즉 소득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노조의 조직적 힘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교섭 체계의 구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맥락에서 노조와 중도 정부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념적 성향 변수와 노조 조직률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중도 정부에서만 유의미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났으며, 좌파 정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권력자원 이론(Huber & Stephens, 2010; Korpi, 2022)과 다소 상반된 결과로, 1990년대 이후 노조와 좌파 정부의 연대가 반드시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노조가 전통적 연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행동하고(Jansson, 2017), 중도 정당들이 정치시장에서 정책을 매개로 새로운 동원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권력자원 이론의 기존 논의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관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중도 정부의 유연한 정책 기조가 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다루는 데 유리했을 가능성, 좌파 정부가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직면하였을 가능성(Rueda, 2005)이 그것인데, 양자는 상호보완적 설명을 제시한다. 중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정치적 변수들을 노조 영향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노조를 단순한 경제적 행위자가 아닌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모두 활용하여 노조의 1차 분배 및 재분배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는 노조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림으로써 1차 분배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노조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분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2차 분배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밝

했다. 또한 노조 조직률과 단체교섭 중앙집중화의 상호작용, 그리고 노조와 중도 정부의 상호작용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단순히 조직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중도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은 전통적인 좌우 대립 구도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앞으로 정치시장과 노동시장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노조가 제도적 및 정치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에, 앞으로도 노조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발견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조 조직률은 10% 중반이라는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약한 노조, 그리고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의 부재가 노-자 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신광영, 2019)과 노조의 조직화가 오히려 노사관계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Lee et al., 2008)은 한국에서 노조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이 정당 체계에서 배제되어 왔던 상황(Kwon, 2022)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노조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는 제시한다. 특히 중앙집중화된 교섭 체계의 구축과 중도 정부와의 협력 모색은 한국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조정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서휘원. (2016). 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의 정치학: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 불평등 증가의 정치적 원인. *사회과학논집* 제47권제2호.
- 신광영. (2019). 21세기 한국사회와 노동. *노동연구* 제38집.
- Baccaro, L. (2011). Labor,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Are Trade Unions Still Redistributive?. in Brady, D. (Ed.) *Comparing European Workers Part B: Policies and Institutions*.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Bartels, L. M. (2016).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2nd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ady, D., Blome, A., & Kleider, H. (2017). How Politics and Institutions Shape Poverty and Inequality. in Brady, D., and Linda M. B.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Social Science of Povert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Darvas, Z., Gotti, G., & Sekut, K. (2023). Trade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and income inequality: a transatlantic comparative analysis. in *The future of work: a transatlantic perspective 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ruegel. https://EconPapers.repec.org/RePEc:bre:bebook:node_8842
- Doellgast, V., & Benassi, C. (2020). Collective bargaining. in Wilkinson, A., et al.(eds) *Handbook of Research on Employee Voice*. Edward Elgar Publishing.
- Freeman, R. B., & Medoff, J. L. (1984). *What do unions do?*. New York: Basic Books.
- Friedman, M., Friedman, R. (1980). *Free to choose: A personal state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Gautié, J. (2011). France: Protecting the insiders in the crisis and forgetting the outsiders??. in Vaughan-Whitehead, D. (ed.) *Work Inequalities in the Crisi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Hall, P. A., & Soskice, D. W.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 Press.
- Huber, E., & Stephens, J. D. (2010).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nsson, J. (2017). Two Branches of the Same Tree? Party-Union Links in Sweden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Allern, E. H. and Bale, T. *Left-of-Centre Parties and Trade Un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Kelly, N. J. (2009). *The politics of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pi, W. (2022).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Work, unions and politics in Sweden*. London: Routledge.
- Kwon, S. (2022). Labour Union Activism. in Han, J., Pacheco Pardo, R., and Cho, Y. (eds) *The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H. G. (1963). *Unionism and relative wages in the United States: An Empirical inqui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ndvall, J., & Rueda, D. (2012). Insider-Outsider Politics: Party strategies and political behavior in Sweden. in Emmenegger, P., et al.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Pontusson, J. (2011). Once again a Model. in Cronin, J. E., Ross, G. W., & Shoch, J. (Eds.). *What's Left of the Left*. Durham, NC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Books.
- Stephens, J. D. (1976). *The Consequences of Social Structural Change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ism in Swede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 Victor, V. (2019). *The Role of Bargaining Power: How Unions Affect Income Distribution* (Vol. 6). Universitätsverlag Potsdam.
- Addison, J. T. (2016).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and macroeconomic and

- microeconomic flexibility: the quest for appropriate institutional forms in advanced economies. *IZA Journal of Labor Policy* 5.
- Ahlquist, J. S. (2017). Labor unio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1).
- Alexiou, C., & Trachanas, E. (2023). The impact of trade unions and government party orientation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17 OECD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Studies* 50(3).
- Blau, F. D., & Kahn, L. M. (1996).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male wage inequality: institutions versus market for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4).
- Bradley, D., Huber, E., Moller, S., Nielsen, F., & Stephens, J. D. (2003).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World Politics* 55(2).
- Card, D. (2001). The effect of unions on wage inequality in the US labor market. *ILR Review* 54(2).
- Chao, C. C., & Ee, M. S. (2024). Does unionization reduce wage inequality? New evidence from business dynamism.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92.
- Dahl, C. M., Maire, D. L., & Munch, J. R. (2013). Wage dispersion and decentralization of wage bargain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3).
- Gamero, A. (2021). The impact of collective bargaining on employment and wage inequality: Evidence from a new taxonomy of bargaining systems.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7(2).
- Guschanski, A., & Onaran, Ö. (2022). The decline in the wage share: falling bargaining power of labour or technological progress? Industry-level evidence from the OECD. *Socio-Economic Review* 20(3).
- Jaumotte, F., & Osorio Buitron, C. (2020). Inequality: traditional drivers and the role of union power. *Oxford Economic Papers* 72(1).
- Kelly, N. J., & Witko, C. (2012). Federalism and American inequality. *The Journal of Politics* 74(2).

- Kenworthy, L. (2001). Wage-setting measures: A survey and assessment. *World Politics* 54(1).
- Keune, M. (2021). Inequality between capital and labour and among wage-earners: the rol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rade unions.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27(1).
- Kim, S. E., & Margalit, Y. (2017). Informed preferences? The impact of unions on workers' policy view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3).
- Korpi, W. (1989). Power, politics, and state autonom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during sickness in eighteen OECD countries since 193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 Kristal, T., & Cohen, Y. (2017). The causes of rising wage inequality: the race between institutions and technology. *Socio-Economic Review* 15(1).
- Lee, Y., Chung, S., & Jang, H. (2008). Labor and politics in East Asia: The case of failure of the encompassing labor organization in Korea. *Asian Perspective* 32(3).
- Leighley, J. E., & Nagler, J. (2007). Unions, voter turnout, and class bias in the US electorate, 1964–2004. *The Journal of Politics* 69(2).
- Lindbeck, A., & Snower, D. J. (2001). Insiders versus outsid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1).
- Lindvall, J., & Rueda, D. (2014). The insider–outsider dilemm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2).
- Macdonald, D. (2019). Labor unions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an era of inequality. *Social Science Quarterly* 100(4).
- Montebello, R., Spiteri, J., & Von Brockdorff, P. (2023). Trade unions and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 panel of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62(3).
- Mosimann, N., & Pontusson, J. (2017). Solidaristic unionism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Europe. *World Politics* 69(3).
- Öberg, P., Svensson, T., Christiansen, P. M., Nørgaard, A. S., Rommetvedt, H., & Thesen, G. (2011). Disrupted exchange and declining corporatism:

- Government authority and interest group capability in Scandinavia. *Government and Opposition* 46(3).
- Palier, B., & Thelen, K. (2010). Institutionalizing dualism: Complementarities and change in France and Germany. *Politics & Society* 38(1).
- Perron, S. (2023). Unions and moral economies: An investigation into cultural pathways linking union decline to rising income inequality, 1983–2018.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87.
- Pontusson, J. (2013). Unionization,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1(4).
- Rueda, D. (2005). Insider–outsider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 Rueda, D. (2008). Left government, policy, and corporatism: Explaining the influence of partisanship on inequality. *World Politics* 60(3).
- Solt, F. (2020). Measuring Income Inequality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cial Science Quarterly* 101(3): SWIID Version 9.6, December 2023.
- Son, J. W., & Park, J. H. (2024). Centre party, district magnitude, and wage inequality in service econom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1).
- Vandekerckhove, S., Lenaerts, K., Blaziene, I., Mieziene, R., De la Fuente Sanz, L., & Cruces Aguilera, J. (2022). Fair wages, collective bargaining, and income inequality. Conceptual framework, challenges and the role of industrial relations. *BFORE Project Deliverable 1.1 Review on industrial relations and income inequality* (Working Paper D1.1; BFORE - Bargaining for Equality, p. 98).
- Visser, J. (2013). Wage Bargaining Institutions—from crisis to crisis. *European Economy-Economic Papers 2008-2015* (488).
- Visser, J. (2016). What happened to collective bargaini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IZA Journal of Labor Policy* 5(1).

Wallerstein, M., & Western, B. (2000). Unions in decline? What has changed and wh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Western, B., & Rosenfeld, J. (2011). Unions, norms, and the rise in US wag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4).

Armingeon, K., Engler, S., Leemann, L., & Weisstanner, D. (2023).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1960-2021*. Zurich/Lueneburg/Lucerne: University of Zurich, Leuphana University Lueneburg, and University of Lucerne.

Manuscript: Sept 22, 2024; Review completed: Oct 02, 2024; Accepted: Oct 12, 2024